



## 북핵 문제, 강력한 대응책 필요

강태규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금요정책세미나를 바탕으로 작성된 브리핑자료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6자회담 ‘역이용론(逆利用論)’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철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접근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폐기시한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 6자회담 무용론의 대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이후 벌써 2년 반 가까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금년 1월 19일 미중 간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의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제안에 따라 다시 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무회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6자회담은 당분간 다시 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체재 결의안(1718호)을 무시한 채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0년 11월에는 방북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까지 공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de facto)’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을 넘어서, 6자회담이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6자회담 ‘역이용론(逆利用論)’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애당초 이 회담을 열게 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그 실체와 대비책, 그리고 관련 주변국들의 입장까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문은 용도 폐기된 휴지

순서상 북핵 문제의 실체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즉, 과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짚어봐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만일 북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정부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문은 과거 모든 남북합의문의 경우처럼 이미 용도 폐기된 휴지나 다름없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 또는 용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이하고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

망’이라는 보고서(2009. 5)에서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30~50kg을 생산했으며, 6~1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니스 블레이 전 미 국가정보국장도 2010년 10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탄두 8~10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 당국은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설비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윌레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제조능력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미 국방부가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 보고서(2010. 2)에서 나타나 있듯이 북한은 “향후 10년 내에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6자회담을 통해서만 찾으려 하고 있다. 그마저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의 재개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가 갖는 파괴력이나 파급효과를 보더라도 남북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관련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은 1993년 3월 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제1차 북핵 위기를 초래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합의도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 이후 결국 사문화(死文化)된 전례가 있다.

### 북핵에 대한 중국의 복심(腹心)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6자회담을 굳이 중국에서 개최해오고 있는 것도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6자 회담 관련국 중에서도 최소한 중국의 입장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는 순간 일본과 대만 역시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알려진 것보다 미미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오히려 6자회담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세력 판도에 미국을 넘어선 분명한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일면 방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유지와 함께,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복심(腹心)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국익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할 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이웃나라의 입장을 헤아려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순진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국 중심의 태도는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자간 협의체라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애당초부터 매우 지난(至難)한 방식이었다.

####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할 때

다음으로는 북한에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한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는 현재의 6자회담 해결 방식이 과연 타당하고도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분명 통상적인 '주고받는(give and take)' 거래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threats)'에 대해 그 위협을 철회하는데 대한 '대가(benefits)'를 지불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타당치 않다. 아울러 이와 같이 해결하려들면 상대는 자신들의 위협이 먹혀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대가'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위협'의 수위를 높이려 들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핵억지력(核抑止力)'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억지'를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

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건만 갖고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위협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응책(counter-stroke)'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cost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야만 타당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작정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시한(deadline)'도 함께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핵억지력' 차원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핵강대국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대응책이겠지만,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유사시 북한 핵무기 개발 지역에 대한 제한적 폭격과 같은 대응책은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의 억지논리처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겨냥되고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6자회담 틀 내에서 접근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의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책과 시한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관련국들의 다자간 협

의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올릴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정책제안〉

-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대책 필요
- √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입장에 대해 재검토할 시기
-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문’의 효력 상실에 대한 대책
- √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대응책 (counter-stroke) 추진

필자 | 강태규 Ph.D.

-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
- (현) 한국외대 강사
- (전)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 (전) (사)나라정책연구회 정책실장
- (전) (사)문화문 사무처장